

거짓 채용공고·부당채용 청탁 등 온라인·건설현장 불공정사례 점검

고용부, 내달부터 점검 예정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와
채용서류 절차 안내 등 집중

고용노동부가 17일 거짓 채용공고 및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대한 '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단은 오는 10월4일부터~11월30일까지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대상은 워크넷 구인공고 사업장 200개소와 건설사업장 200개소이다.

특히 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사례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청년들의 이의제기가 많다"며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해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 상 문제들을 시정해 채용절차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현장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2021년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다"며 "법과 원칙의 안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국조실 주관으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 건물. /뉴스1

로, 고용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이 참여하고 있다. 채용강요와 기계사용 강요, 업무방해 등 건설현장 내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이 밖에 이번 집중 지도·점검과 별도로 고용부는 지난4월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상시 점검 중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거짓채용광고 금지'는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이나 홍보 목적 등의 채용광고를 금지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기재 요구 및 수집을 금지한다. ①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채용강요 등 금지'는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재산상의 이익 제공과 수수를 금지한다.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해져야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가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국립생물자원관, '독도점등에모기' 신종 확인

70년간 독도경비대원 괴롭혀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7일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 온 흡혈성 곤충이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이 곤충을 '독도점등에모기(Culicoides dokdoensis)'라고 이름 지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배연재 고려대학교 수 연구진은 지난해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독도점등에모기'를 파리목(Order Diptera)과 등에모기과(Family Ceratopogonidae), 점등에모

기속(Genus Culicoides)에 속하는 신종 곤충으로 확인했다.

이 종은 깨알만 한 크기(몸길이 2~3mm)로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동안 깔따구로 오인돼 왔다. 그러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깔따구와는 달리 식물의 즙이나 꿀을 먹으며 서식한다. 산란기의 암컷은 척추동물의 피부와 모세혈관을 이빨로 찢어 흡혈한다.

연구진은 독도의 지명을 딴 독도점등에모기의 형태 및 생태정보를 최근 곤충학 국제학술지에 투고했다. 올해 말 국가생물종목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안전확보 맞춘

화학물질안전원

새만금개발청-군산시와 협약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18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협약으로, 행사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2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 오식도동 일대에 8.1㎢(서울 여의도 면적의 2.8배) 규모로 조성된다.

안전원은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

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협약은 공장설계단계부터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취급 화학물질의 반응 △화재·폭발 위험성 분석 △시설 안전성 평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 3D프린팅 국제표준화 주도 나서

국표원, 3D프린팅 기술총회서
압입시험 적용한 내구성 평가 제안
세라믹 소재 특성 표준안 3건 논의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평가와 3D프린팅 재료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22일까지 5일간 인천 항공우주 산학융합원에서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위원회(I SO/TC 261) 총회를 3D융합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3D프린팅 분야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등 27개 회원국 표준 전

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기존 금속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시험보다 간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제안자 한국재료연구원 권준범)을 신규 제안한다.

또 지난 2021년 3D프린팅의 재료 다양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액조광경화용 세라믹 슬러리 재료 특성', '보급형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비산업용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저감 고려사항' 등 세라믹 소재 특성 표준안 3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간소화된 내구성 평가방법의 효과 등으로 급성장 중인 금

속 3D프린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세라믹 재료 표준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주재료였던 3D프린팅 산업계에 검증된 소재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D프린팅 분야 전문 시장조사보고서인 웰러스 리포트(Wohlers Report)에 따르면, 금속 3D프린팅 장비 시장은 2018년 9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13억7000만달러로 급성장 추세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3D프린팅 기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의 표준화 세미나도 열려 최신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뉴스1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할납부 가능

산업부, 내달부터 시행

가스요금 인상으로 올 겨울 난방비 부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달부터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전용앱 등에서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음식점과 미용실 등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상가나 빌딩 등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분

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발급이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10월에 청구되는 9월 사용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 한번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 협조를 사전 요청했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이번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주)테스트테크,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16건 의혹 확인

고용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적발
여성·20대 직원 대부분 경험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 등의 일상적 폭언 및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주)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을 일삼는 등 노동관계법(총 16건) 위배 의혹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업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총 3800만 원을 체불했다. 또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부

과(9건·3100만 원) 등 행정·사법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에 더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사 내 응답자의 77%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78.7%)을 비롯해 20대(84.2%) 직원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